

2022 대선보도 모니터 보고서 모음집



부산민주연론시민연합

부산2022대선미디어감시연대

주소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88 301호
전화 051-802-0916
홈페이지 www.bssiminnet.or.kr
이메일 buun1@hanmail.net

- 문서번호 부산대선미디어감시연대2022-01
- 수 신 각 언론사 보도국, 편집국
- 발 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제 목 [대선보도모니터] 질문하는 언론은 어디에?
- 날 짜 2022년 1월 26일

질문하는 언론은 어디에?

후보 행보·발표 공약 받아쓰기 보도에 그쳐

모니터 기간	2022년 1월 17일(월)~23일(일)
모니터 매체	국제신문, 부산일보 지면, KBS부산, 부산MBC, KNN 메인뉴스

대선이 40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 배우자 논란, 상호 의혹 제기와 공방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주말인 1월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부산을 찾아 공약을 대거 발표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부터 2주간 부산에 머무르며 선거 지원에 나섰고, 23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PK지역을 방문하는 등 대선후보와 당대표의 행보가 이어진 한 주였다.

지역언론은 <표 1>에서와 같이 발표된 공약을 전달하면서도, 각 후보와 정당의 행보 일정으로 전하거나 선거전략으로 분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책에 대한 해설이나 평가,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전하는 보도는 찾기 어려웠다. 특히 지역신문은 국민의힘 당내 갈등과 선거판세를 전달하는 보도에 정치면을 할애했다.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정책·공약	5	8	2	4	2	21
후보·정당행보	6	1	2	2	5	16
선거전략/판세	4	7	2	0	1	14
후보·배우자 의혹, 논란	4	6	0	0	0	10
갈등·공방	3	3	0	0	0	6
기타	1	1	0	0	0	2
보도량 합계	23	26	6	6	8	69

△ 표1 대선 보도량 및 주요주제

정책보도, 후보 발표공약 전달에만 치중

모니터 기간 언급된 정책·공약은 <표 2>와 같이 부산공약을 비롯해 다양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부산공약으로 발표한 가덕신공항 예타면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비롯해 2030등록엑스포 유치 지원, 부울경메가시티, 경부선지하화, 북항재개발 등이 주로 언급되었다. 이외 각당에서 발표한 공약과 지방분권개헌, 탄소중립, 수산 공약 등 시민단체와 산업계가 제안한 공약도 언급되었다.

가덕신공항 예타면제와 조속한 추진,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부울경메가시티 성공 지원, 2030 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북항재개발 사업 조속 완성, 경부선 철도 지하화, 부울경 광역급행철도 건설, 55보급창과 8부두 이전,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 등 공공의료망 확충, 블록체인 특화도시 조성, 해사 전문법원 설립, 해양문화관광 도시 재도약
난임, 불법촬영관련정책, 플라스틱제로
블록체인특화도시조성, 가상자산업제도화공약, 가상자산개미투자자안심투자공약, 가상화폐공개허용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일자리관련공약, 한국판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단일임금체계단계적도입,
소득세인적공제확대, 문화예술공약, 노인공약
수산분야 공약, 지방분권개헌, 분권균형발전부 설치 등 9개 분권공약 제안 등

△ 표2 모니터 기간 언급된 공약

하지만 이들 공약 대부분은 <이재명 "가상자산 법제화...ICO 허용 검토" 윤석열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국제신문, 1월 20일), <이 "예술인 기본소득' 윤 "소득세 공제 확대">(부산일보, 1월 21일)와 같이 후보와 정당이 발표하는 공약을 나열하며 '언급'만 한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후보와 정당측의 제안배경이나, 언론사의 평가는 거의 없었다.

모니터 기간 부산 공약을 발표한 윤석열 후보 공약에 대해서도 전달 위주였다. 부산일보가 1월 18일 <꼭 이뤄야 할 '산업은행 부산행'...글로벌 금융도시 '지름길>에서 KDB산업은행 유치 의의와 방법 등을 설명하며 새로운 공약으로 부각했고, 대부분 보도는 진일보한 공약 이다는 평가 외 적절성, 실현가능성을 짚지 않았다.

정책 언급량은 가덕신공항 예타면제가 가장 많았지만 '이미 가덕신공항특별법에 반영'되었다는 지적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으로 다뤘다. 부산일보는 1월 18일 <"덧북 공약" "사실 호도"...가덕 예타 면제 연일 공방>에서 여야 공방을 전했고 KNN은 1월 17일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공약 논란>에서 이미 반영된 예타면제를 다시 언급함으로써 논의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와 소극적이었던 야당이 완전 찬성으로 돌아서 탄력을 받게 되었다는 입장을 각각 전했다.

한편 국제신문은 1월 16일 <[뉴스분석] 윤석열 '55보급창 이전' 공약 실현 가능할까>, 1월 23일 <부산 철도 지하화·GTX 건설…너무 닮은 대선 공약>에서 '55보급창 이전 조건' 짚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공약의 유사점을 지적하기도 했으나 온라인에서만 게재했다. 1월 21일 <윤 성에 안 찼던 부산선대위 발대식>에서는 부산선대위 발대식 규모에 윤 후보가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카더라식' 보도를 실어 후일담에 더 주목하는 모양새였다.

부산일보는 윤석열 후보가 부산을 떠난 후 1월 20일 <윤석열 부산 파격 공약 뒤엔 '정책 브레인' 박성훈 있었다>에서 산업은행 유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울경GTX건설, 55보급창·8부두이전 등 공약 선정에 박성훈 부산시 전 부시장 역할이 있었다며 캠프 인사를 부각하기도 했다.

정책보도에 있어 후보별 치우침도 크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언급량	36	48	11	6
정책보도 속 언급량	9	15	0	0

△표3 후보별 언급량 (*월내정당 후보 기준 단순 언급 모두 포함)

모니터 기간 대선후보 언급량을 보면 윤석열 후보 48번, 이재명 후보 36번, 안철수 후보 11번, 심상정 후보 6번으로 편차를 보였다. 그런데 정책을 소개한 기사에서의 후보 언급량은 윤석열 후보 15번, 이재명 후보 9번, 안철수, 심상정 후보 0번으로 더 차이를 보였다. 안철수 후보 기사는 지지율 반등에 따른 야권 단일화 이슈 등 선거 전략과 행보 위주로 보도했고, 행보 기사 중에 부·울·경매가시티, 가덕신공항지지 여부를 단순 언급만 했을 뿐이다.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은 어디로?

물론 후보들이 정책·공약 경쟁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경우 지역언론에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지역현안을 적극 질문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기사도, 기획보도도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부산지역 방송 3사가 신년기획으로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1월 3일 방송)에 따르면, 부산시민은 우선순위로 뒤야할 지역 정책·공약으로 가덕신공항, 동·서부산 균형발전, 지역공공의료 확충, 그리고 여야가 참여하게 대립중인 원전 및 에너지 순으로 꼽았다. 지역언론이 주요 과제로 제시하는 부울경매가시티, 2030등록엑스포 등과 우선 순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 그림1 KBS부산 <뉴스9> 1월 3일 여론조사 결과 보도

특히 최근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한목소리를 내는 이슈로 ‘원전 관련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있다. 원전 및 에너지 정책, 시민 안전과 모두 관련 깊은 이슈다. 그런데 유력 대선 후보가 부산을 방문했는데도 이와 관련한 후보들의 입장, 공약은 무엇인지 묻는 언론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에게 지역공약을 제안하고 지역정책을 묻는 것은 지역언론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유력 후보 행보만 쫓지 말고 지역공약이 없으면 없다 진단하고 지역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묻는 보도가 절실하다.

<끝>

2022대선미디어감시연대

전화 051-802-0916

www.bssiminnet.or.kr

이메일 buun1@hanmail.net

• 문서번호	부산대선미디어감시연대2022-02
• 수 신	각 언론사 보도국, 편집국
• 발 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제 목	[대선보도모니터] '개발 공약'만 부각한 지역언론
• 날 짜	소수정당 홀대가 '사회적 약자 공약' 홀대로 이어져 2022년 02월 09일

‘개발 공약’만 부각한 지역언론 소수정당 홀대가 ‘사회적 약자 공약’ 홀대로 이어져

모니터 기간	2022년 01월 24일(월) ~ 2022년 02월 06일(일)
모니터 매체	국제신문, 부산일보 지면, KBS부산, 부산MBC, KNN 메인뉴스

20대 대선에선 작은 공약과 짧은 문장의 정책이 선거전략의 하나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이자, 다음 대통령은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중책이 있음에도 ‘심쿵약속’, ‘소확행’이라는 네이밍의 무게는 한없이 가볍다.

짧고 간결하고 빠른 것을 선호하는 시류에 편승한 정치권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유권자다. 목적, 가치, 실현 방안 등 공약을 발표할 때 갖춰야 할 최소한의 것이 모두 생략된 ‘7자 공약’ 발표는 유권자를 찬성과 반대로 나눌 뿐, 더 나아진 사회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가로 막았다.

논의해야 할 이슈를 찬반이슈로, 짧게 전달하는 대통령 후보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언론이 묻고 따져주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보도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지역언론의 정책·공약 보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또 지난 3일 처음으로 ‘2022 대선후보 토론’이 열렸다. 120분 남짓의 시간에 후보 4명의 정책, 공약이 온전히 담기긴 어려웠다는 평이 전반적이다. 하지만 부동산, 원자력발전과 같이 부산 지역과 밀접한 이슈가 언급되기도 했다. 이를 지역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살펴봤다.

설 연휴가 길었던 탓에, 부산2022대선미디어감시연대의 이번 2차 보고서는 1월 24일부터 2월 6일을 모니터 대상으로 하며, TV토론과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해선 모니터 기간이 아니어도 관련 기사를 포함했다.

연휴엔 선거보도도 쉽니다?

'TV토론' 지역언론이 전달할 내용 정말 없었나

보도량을 보면 방송3사의 선거보도는 설 연휴 기간에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1월 29일(토)부터 2월 2일(수)까지 방송3사 모두 리포트 1건이 선거보도의 전부였다. 방송3사의 선거보도는 대체로 후보가 부산을 방문했다거나, 지역 선대위가 캠페인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발생이슈를 전달하는데, 그 탓에 설 연휴 기간 선거보도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KBS부산의 경우 연휴가 시작된 1월 29일(토)부터 2월 5일(토) 일주일 간 유일한 선거보도는 <“여야, 부산 경제 회생시킬 공약 내놔야”>(1/30, 첫 순서 리포트)로 부산경제계(상공회의소)의 정책 건의에 대해 여야가 긍정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이었다. 부산MBC는 26일 10번째 단신, KNN은 26일 8번째 단신으로 부산상의회가 국민의힘 선대위에 정책 건의를 한 사실을 전달한 바있다.

	KBS부산		부산MBC		KNN		국제신문				부산일보			
	리포트	단신	리포트	단신	리포트	단신	기 사	사 진	기 고	사 설	기 사	사 진	기 고	사 설
01월24일(월)	0	0	0	1	0	0	5	0	1	2	6	1	1	1
01월25일(화)	1	2	0	0	2	0	7	0	1	0	8	1	0	1
01월26일(수)	1	0	0	1	0	1	8	0	0	0	7	0	0	1
01월27일(목)	1	0	0	1	0	1	3	0	1	0	7	0	0	1
01월28일(금)	1	1	1	1	1	0	6	0	0	1	4	0	0	1
01월29일(토)	0	0	0	0	0	0	<휴간>				<휴간>			
01월30일(일)	1	0	0	0	1	0								
01월31일(월)	0	0	0	0	0	0								
02월01일(화)	0	0	0	0	0	0								
02월02일(수)	0	0	1	0	0	0								
02월03일(목)	0	0	1	0	0	0	3	0	0	1	4	0	1	1
02월04일(금)	0	0	1	0	0	0	5	0	0	1	5	1	2	1
02월05일(토)	0	2	1	1	0	1	<휴간>				<휴간>			
02월06일(일)	1	0	1	0	1	0								
합계	6	5	6	5	5	3	37	0	3	5	41	3	4	7
총 보도 건수	11건		11건		8건		45건				55건			

<표1> 지역언론 5개사 보도건수 및 기사 유형



△ (좌) KBS부산 대선기획 (우) 부산MBC, 2/4

한편 KBS부산은 이번 모니터 기간 방송3사 중 유일하게 선거보도 기획을 선보이기도 했다. ‘대선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로 1월 26일, 27일, 28일 사흘에 걸쳐 보도했다. 지역총국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기획의 첫 리포트는 △지방소멸 △2차 공공기관 이전 △의료격차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지역의 공통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과 생각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눈에 띄는 점은 최근 지역의 주요 사안인 원전 이슈는 별도 리포트로 구성해 전달했다는 점이다.

KBS부산은 지역의 공통현안에 이어 부산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도 기획 리포트로 전달했다. KBS부산이 꼽은 지역현안은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 △부울경메가시티 △2030월드엑스포 △북항 앞바다 UN해양도시 △어반루프 도입 △청사포 앞 해상풍력 단지 △경부선 철도지하화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 등이었다. 특기할 점은 부산 시장 추진 정책이긴 하나, 부산 내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부산 지역현안으로 꼽았다는 점이다. 해당 리포트 역시, 후보별 입장이 같다, 다르다, 찬성이다, 반대다 등 입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부산MBC는 지역언론 5개사 중 유일하게 3일에 열린 ‘2022대선 후보 토론’을 지역의 관점으로 조명해 전달했다. <대선 토론, 지역이슈 실종>(2/4, 첫 순서 리포트)은 첫 대선 토론이 국민적 관심 속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오갔다면에서도 소멸위기 비수도권 현실에 대한 진단과 해법 논의는 실종됐다고 짚었다. 원전 정책 역시 에너지 대책으로 논의됐을 뿐, 비수도권의 최대 현안인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대선 토론이 목요일(3일) 저녁에 열리면서, 지역신문은 이 소식을 금요일에 사진으로만 실었다. 이후 부산일보의 경우 <‘친원전’ 윤석열, TV토론서도 핵폐기물 처리 無해법>(2/4)를 통해 윤석열 후보가 원전 정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며, 윤 후보의 원전 낙관론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온라인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일보 7일자 정치면의 이슈는 가덕신공항과 2030부산엑스포 추진에 대한 후보 입장이었다.

후보 공약,
검증과 비판 보이지 않는다

이번 모니터 기간 지역언론의 선거보도를 주제별로 보면 정책·공약 보도의 비중이 컸다. 건수로 보면 부산일보가 18건, 국제신문 16건, KBS부산 6건, 부산MBC와 KNN은 각각 4건이었다.

	KBS부산	부산MBC	KNN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정책·공약	6건 (54.5%)	4건 (36.3%)	4건 (50.0%)	16건 (35.5%)	18건 (32.7%)	48건
후보·정당 행보	4건 (36.3%)	4건 (36.3%)	3건 (37.5%)	8건 (17.7%)	6건 (10.9%)	25건
선거전략· 판세	0건	2건 (18.1%)	1건 (12.5%)	11건 (24.4%)	23건 (41.8%)	37건
의혹·논란	0건	0건	0건	1건 (2.2%)	3건 (5.4%)	4건
갈등·공방	0건	1건 (9.0%)	0건	6건 (13.3%)	4건 (7.2%)	11건
기타	1건 (9.0%)	0건	0건	3건 (6.6%)	1건 (1.8%)	5건
합계	11건	11건	8건	45건	55건	130건

<표2> 대선 보도 주요 주제

정책·공약 보도는 △정책·공약 발표를 단순 전달한 경우(11건) △경제계, 시민사회 등에서 대선후보에게 정책을 제안한 경우(20건) △후보나 정당의 행보 중 정책·공약 발표를 주요하게 언급한 경우(7건) △후보의 정책·공약을 선거전략 중 하나로 분석하는 경우(5건) △후보의 정책·공약 발표를 후보 간 갈등·공방으로 부각하는 경우(2건) △정책·공약을 비판하는 경우(3건) 등의 경향을 보였다.

먼저, 지역언론에서 전달한 경제계·시민사회 등의 정책 제안은 해양특별자치시, 지방분권개헌,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지역균형발전 분야가 주를 이뤘다. 부산일보는 이번 모니터 기간 나온 사설 7건 중 3건에서, 국제신문은 사설 5건 중 2건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일보의 경우 정책·공약 보도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비교하기 보다는 각각의 공약 발표를 나열하거나, 공약을 발표한 ‘장소’에 주목하면서 선거전략의 측면에서 공약을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1월 25일자 6면 <이 “경기 전역 30분대 연결” 윤 “대북 억제력 강화”>와 2월 3일자 4면 <이재명 “사법고시 부활”…윤석열 “사드 추가 배치”>가 대표적이다.

이런 기사의 문제점은 후보의 공약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 교통 정책과 윤석열 후보의 대북정책은 두 후보가 24일에 발표했다는 것 외 이렇다할 공통분모가 없다. 사법고시 부활과 사드 추가 배치도 마찬가지다. 사법고시 부활을 후보가 공약으로 냈다면 공약 발표의 배경, 실현 방안, 전문가 의견 등을 담아내 유권자가 이러한 공약 필요성 여부에 대해 생각하게 해야 하지만, 신문지면에선 상대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과 나란히 제시됐다.

이번 모니터 기간, 정책·공약 비판 보도 중 부산일보의 <윤석열 ‘탈원전 백지화’...“원전 이고 사는 PK 주민 어찌라고”>(1/27, 5면)가 눈에 띄었다. 해당 기사가 비판하고 있는 시점은 1월 24일로, 이날 있었던 환경 관련 공약 발표와 한신협 인터뷰에서의 윤 후보 발언을 비판했다. 이 내용은 25일자 부산일보에 실린 윤석열 후보 인터뷰 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개발 공약 외 대선 공약, 지역언론에 보이지 않아 심상정 후보의 사회적 약자 관련 공약 여전히 홀대

매체별 후보 언급 빈도 및 보도경향을 살펴봤다. 기사에서 후보의 이름을 언급한 경우는 ‘단순 언급’으로, 전체 기사 흐름 속에서 특정 후보를 강조하거나 후보 단독 기사일 경우는 ‘우세 언급’으로 집계했다.

방송3사의 경우 주요 선거보도 경향이 후보·정당 행보이기 때문에, 후보의 부산 방문여부가 후보 언급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비교했을 때, 이 시기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 우세 언급이 우세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신문의 경우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대한 ‘단순’, ‘우세’ 언급이 동일했던 것으로 집계됐으며, 부산일보 역시 1~2회의 차이는 있었으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후보 언급에서 가장 문제로 보인 지점은 부산을 방문한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역언론의 홀대이다. 특히 부산일보의 경우 이 기간 심상정 후보는 단 2번 등장했는데, 모두 대선후보 4명을 언급한 기사였다. 이 기사에서도 심 후보가 부산을 방문한 사실조차 전달하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의 부산방문 역시 ‘사진 기사’ 1건으로 갈무리 하였으며, 이외 안 후보에 대한 대부분의 언급이 야권 단일화에 초점 맞춰졌다.

단순 언급	KBS부산	부산MBC	KNN	국제신문	부산일보
이재명	7회	3회	5회	19회	24회
윤석열	3회	2회	3회	19회	26회
심상정	1회	1회	1회	7회	2회
안철수	3회	1회	1회	8회	10회

〈표3〉 기사 내 후보 ‘단순 언급’ 빈도

우세 언급	KBS부산	부산MBC	KNN	국제신문	부산일보
이재명	4회	2회	2회	9회	4회
윤석열	0회	0회	0회	9회	5회
심상정	1회	0회	0회	2회	0회
안철수	0회	0회	0회	3회	4회

〈표4〉 기사 내 후보 ‘우세 언급’ 빈도

유일하게 심상정 후보를 ‘우세언급’한 국제신문의 경우, 이 기간 심상정 후보 인터뷰 기사를 1월 25일자 1면과 4면에 배치했다. 약자를 대변하겠다는 심상정 후보의 정치철학과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이 담겼다.

지역언론의 소수정당 후보 홀대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 이유는, 후보를 홀대함으로써 후보가 주장하는 가치와 후보가 대변하는 국민을 홀대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 지역언론에선 가덕신공항, 2030부산엑스포, 공공기관2차이전, 지방분권 개헌 등 대부분의 공약이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인권, 복지, 기후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후보 공약 조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부산일보, 국제신문 후보인터뷰 질문을 살펴봤다 윤석열 후보에 가장 많은 질문한 부산일보

이번 모니터 기간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에서는 대선후보 인터뷰 기사가 있었다. 국제신문은 1월 25일에 심상정 후보 인터뷰를 실었고, 부산일보는 1월 26일엔 윤석열 후보, 1월 27일엔 안철수 후보 인터뷰를 실었다. 이를 계기로 국제신문의 경우 지난해 11월 18일 안철수, 12월 29일 이재명 인터뷰 질문까지 포함해 비교했고, 부산일보는 지난해 12월 28일 있었던 이재명 후보 인터뷰 질문까지 포함해 비교해 봤다(참고 <표5>).

먼저 국제신문은 안철수, 이재명, 심상정 순으로 대선후보 인터뷰 기사를 실었으나, 한 달 간격으로 보도가 이뤄져 질문 간 연속성을 기대하긴 어려웠다. 그럼에도 11월 18일자 4면에 실린 안철수 후보 인터뷰는 두 후보에 비해 기사 분량도 적었을 뿐 아니라, 인터뷰를 진행한 시기 상, 공약·정책보다는 출마의 변에 가까운 내용 구성을 다소 아쉬웠다(첨부 <표 6>).

국제신문	부산일보
<p>[안철수] 11월 18일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끝까지 완주...국힘이 양보하면 압도적 정권교체 가능"(4면, 3단기사) <p>[이재명] 12월 29일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덕신공항, 새만금처럼 끌면 안돼"(1면, 머리기사) - "메가시티는 재정지원이 핵심...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필요"(4면, 5단기사) <p>[심상정] 1월 25일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기득권 조정없이 균형발전 운운 비겁"(1면, 하단 4단기사) - "70년 된 노동법 제 구실 못해 개정 필요요주 4일제로 가자"(4면 6단기사) 	<p>[이재명] 12월 28일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부산월드엑스포 반드시 유치하겠다"(1면, 머리기사) - "지방소멸은 곧 국가 소멸...균형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3면, 6단기사) <p>[윤석열] 1월 26일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석열 "산은 부산 이전, 단독으로 관철 시키겠다"(1면, 4단기사) - "부울경 메가시티 지역상생기업 적극 지원하겠다"(4면, 6단기사) <p>[안철수] 1월 27일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철수 "지방 소멸 막으려면 민간 기업 지역 분산해야"(1면, 4단기사) - "2030-중도층 결집 확산, 남은 40여 일이면 충분"(4면, 6단기사)

<표5> 국제신문, 부산일보의 대선후보 인터뷰 기사 제목

부산일보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세 후보의 인터뷰 기사 모두 1면에 노출했지만, 이재명 후보만 머리기사로 올렸다. 부산일보의 질문을 보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후보별 질문의 특색을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가족리스크에 대한 입장, 전두환 공과 발언에 대한 비판이 포함됐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철학, 논란 발언, 가족리스크 등 검증할 수 있는 질문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윤석열 후보의 노동관을 엿볼 수 있는 발언(손발 노동, 주 120시간제 등)이 논란 속에 있었음에도 이를 '논란' 대신 '노동 개혁'이라 질문을 던져 눈에 띄었다(첨부 <표7>). 또 윤석열 후보와 비슷한 시기 인터뷰한 안철수 후보 기사에는 정책이나 공약 관련 질문은 거의 없고, 출마 결심 및 정치 행보와 관련한 질문과 대답이 이어져 차이를 보였다. 언론이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후보에 대한 인상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동정이나 행보 중심의 질문이 대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 전달이 부족했다.

부산일보가 보도한 한신협 2차 여론조사, 1차와 무엇이 달랐나

부산일보가 속해 있는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난해 11월 25일, 대선 여론조사를 12월말, 1월말, 대선직전 이렇게 3차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 기간 유일한 여론조사 결과

1차 여론조사 당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물었던 문항이 2차에선 이어지지 않음으로써, 1차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나온 <지방 잘 살릴 후보는 '이재명-윤석열-안철수' 순> 제목의 기사가, 대선 후보들이 부산을 방문해 공약을 발표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진 셈이다.

결과적으로 2차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1월 25일자에는 <윤일화든 안일화든...보수 야권 단일화 '필승 카드' 재확인> 기사가 실렸다. 해당 기사는 “윤석열-안철수 후보 모두 보수 단일화가 이뤄지면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화 시너지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단일화는 대선 승리라는 공식이 성립 가능할 정도다.”라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야권 선거전략 측면에서 분석해 서술했다.

지방 잘 살릴 후보는 '이재명-윤석열-안철수' 순

이재명 40.2% 오차범위 내 1위
윤석열 36.8%, 안철수 7.6%

지방분권 강화 필요' 75.5% 동의

국가균형발전과 분권 강화 등 지방을 잘 살릴 수 있는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선택을 받았다. 30일 발표된 한국지방신문협회-조원씨앤이의 전국 정치사회 현안 여론조사에서는 지방 부흥 직접 인발'을 뽑아 달라고 별도 문항으로 물었는데 이 후보는 여기서 선순도 40.2%를 받아 1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36.8%)를 오차범위 내(±1.8%)에서 따돌렸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지방도 잘 살릴 수 있는 후보라고 답했다. 다만 윤 후보의 경우 다자대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지지를 39.5%보다 2.7%p 하락한 것이 눈에 띈다. 윤 후보를 지지자는 2.7%p는 지방을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후보는 10.3%에 불과하다.

지방을 잘 살릴 수 있는 후보 (단위: %)

이재명	40.2
윤석열	36.8
안철수	7.6
상상정	3.6
김동원	1.7
김종민	1.1
그외	1.8

이재명 40.2%, 윤석열 36.8%, 안철수 7.6%, 상상정 3.6%, 김동원 1.7%, 김종민 1.1%, 그외 1.8%

수도권 지방 격차 해소 위한 지방분권 강화 필요성 (단위: %)

필요하다	75.5
필요하지 않다	24.5

필요하다 75.5%, 필요하지 않다 24.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

△ 부산일보(12/31, 5면)

윤일화든 안일화든... 보수 야권 단일화 '필승 카드' 재확인

윤 단일화, 이재명에 11.0%p 앞서
단, 2차 9.8%서 40.9%로 급상승
국립 지지층 75.8% 단일화 희망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자 4명 중 3명 가량은 3-9 대선에서 보수 야권 단일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발표한 <부산일보>와 한국지방신문협회 등의 2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보수 단일화에 대해 찬성 의견 47.9%, 반대 의견 43.3%로 집계됐다.

표면적으로 찬반 여론은 엇비슷해, 보수 진영과 두 후보 지지층에서는 단일화 요구가 거세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5.8%가 단일화에 찬성(반대 20.2%)였고, 국민의당 지지층은 69.5%(반대 27.7%)가 단일화에 찬성했다. 연령별로도 보수 지지층이 많은 60세 이상에서 유일하게 찬성(56.4%) 여론이 정체 찬성(47.9%) 응답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구(56.1%), 서울(55.5%)

윤석열 단일 후보 출마 시 가상대결 지지율 (단위: %)

윤석열	47.4
이재명	35.8
상상정	5.8

윤석열 47.4%, 이재명 35.8%, 상상정 5.8%

안철수 단일 후보 출마 시 가상대결 지지율 (단위: %)

안철수	40.9
이재명	29.9
상상정	5.2

안철수 40.9%, 이재명 29.9%, 상상정 5.2%




국민의힘 윤석열(왼쪽)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모두 단일화를 이뤄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두 후보가 각각 서울 중영동에서, 경의도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 부산일보(1/25, 5면)

대선 후보 사진 선택에도 신중해야

이번 모니터 기간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의 대선후보 사진을 살펴봤다.

	국제신문	부산일보
이재명	7회	7회
윤석열	7회	9회
심상정	4회	2회
안철수	5회	6회

〈표8〉 국제신문, 부산일보 ‘대선 후보 사진’ 노출빈도

사진 노출면에서도 심상정 후보가 노출 건수가 적었는데, 부산일보 2회, 국제신문 4회이었다. 특히 부산일보의 심상정 후보 사진 2회는 4명이 동시에 등장하는 사진에 포함된 것이었다.

그리고 부산일보의 경우 이재명 후보 사진에 있어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보였다. 1월 25일자 6면을 들 수 있는데, 6면 머리기사 <’86 용퇴론’ 이어 이재명 7인회 “백의종군”... 여 인적쇄신 가속> 아래에 이재명 후보가 반성의 큰절을 올리는 모습과 나란히 기사 내용과 무관한 윤석열 후보의 기자간담회 모습을 배치했다.

기사 못지않게 사진이 주는 메시지도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진 배치 형평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86 용퇴론’ 이어 이재명 7인회 “백의종군”... 여 인적쇄신 가속

국민 앞에 처절하게 반성할 것” 정성호 의원 등이 후보 측근들 기자회견서 “임명직 안 맡는다” ‘86 용퇴론’ 맞물려 쇄신 급부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당내 측근 그룹인 이른바 ‘7인회’ 소속 현직 의원 6명이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는 흐름에서 실 연류 전이 효과를 끌어하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정책공약 발표하면서 “문정”로 반성 의지를 다지고, 새로운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마침 이날 가진 그룹부터 기록권을 드러내겠다고 발표해 당내 ‘86(80년대 후반~60년대생) 용퇴론’과 맞물려 여론 촉구의 도마노키 인적 쇄신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성호 의원과 당 사무총장인 김영민 의원 등 6명은 이날 회견에서 “오늘 저희 7명은 국민이 선택해 주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7인의 소속이지만 지난해 9월 의원직을 잃은 아규민 전 의원을 앞두고 이호철-양정철-전해철 등 소위 ‘3철’을 비롯한 민주당통합 분재인 후보의 친노(친노·무원) 핵심 참모 출신인 시 9명이 선대위에서 전격 사퇴한 것과 흡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성호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86 용퇴론에 대해 “특별히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서도 “국민들이 민주당을 어떻게 보는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 국민 앞에 처절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인적 쇄신에 힘을 보태 달라는 메시지도 비친다.

실제 재선 진문인 김경민 의원이 거론한 86 용퇴론은 당 인력에서 힘을 받는 분위기다. 김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86 용퇴론이 나온다. 김경민도 임명직 맡지 말자는 결의라며 “그러나 임명직 안 하는 것만으로 되나. 정치를 바꾸지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두고 후배들에게 물려주든지”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에 그런 흐름이 있다. 586 당사자들의 목소리들이 있다”며 “그런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퇴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민주당이 뭔가 혁신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4일 용인시 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정책공약을 발표하기 전 큰절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날 서울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공동비전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에 있구나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며 “그것 자체를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도 인적 쇄신에 힘을 살렸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아천사에서 선거 운동 중 기자들과 만나 7인회 회견에 대해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가 반성하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각오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86 용퇴론에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 갈다”며 “저 자신도 노력할 것이고 민주당도 지금부터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는 “특정 정치인의 진퇴에 관한 문제를 제기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86 용퇴론을 두고 당사자들의 불만한 기류가 나타날 경우 자칫 ‘일타’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비

△ 부산일보(1/25)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배치 사례

- 10 -

[첨부]

안철수 질문	이재명 질문	심상정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윤석열 후보는 공정을 내걸었다. 안철수의 가치는 무엇인가 - 첫 번째 공약이 '555성장' 전략이다 - 부산을 기반으로 했다면 위상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여론이 있다 - 균형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 가덕신공항 추진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 부울경에서는 원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다 - 과거 2030세대, 중도층의 강한 지지를 받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 후보의 완주 의지에도 관심은 단일화에 쏠린다 - 안철수의 실험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중 지는 쪽은 감옥 가야 한다고 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권 시 국정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우선순위는 - 균형발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비호감 대선이라는 여론이 많다 -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생각은 - 실용과 통합을 강조한다. 필요하다면 국민의힘과의 연정 가능성도 있나 - 집권 시 폭넓은 사면을 할 생각이 있나 -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꼽아 달라 -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있다 - 고준위방사선편폐물 저장 문제로 부울경 지역민의 우려가 크다 - 울산 산업의 업그레이드 방안이 궁금하다 - 부울경 메가시티로 서부 경남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당만의 공약은 무엇인가 -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방안은 있나 - 노동이사제에 대한 입장은 - 지지율 하락 원인과 극복 방안은 - 비정규직과 하청업체의 차별적 노동 현실에 대한 대책은 -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입장은

<표6> 국제신문 대선후보 인터뷰 질문 목록

이재명 질문	윤석열 질문	안철수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책의 조화가 가능한가. - 지역대학 등 지자체가 자생력 강화에 방안은. - 조선업 회생을 위한 공약은. - 기획재정부 구조조정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은. - 사회통합과 협치 복원을 위한 복안은. - 형수 욕설 파문, 아들 도박 연루 등 가족 리스크에 입장은. - 전두환 공과 발언 이후 호남 내부에 비판적 시각이 크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됐다. 당선 시 사면에 대한 입장은. - 실용적 통일외교 실현 방안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야권 통합에 대한 생각은? - 이번 3.9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표를 외면하는 부동층을 끌어안을 방법이 있나?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퍼주기' 공약을 비판하지만 윤 후보 역시 연금이나 건보료 등 자칫 표를 잃을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연금을 피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나? - 노동 개혁에 대한 입장도 궁금하다. -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된 정책을 꼽자면? - 원인을 무엇으로 분석하고 있나. - 그렇다면 윤 후보만의 해법은 있나. - 당 대표는 물론 당내 경선 경쟁 후보들과의 내용은 완전히 봉합한 것인가? - 지역소멸 문제가 심각하다. 윤 후보가 가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 수도권 일극체계에 대응해 비수도권 광역단체는 초광역협력을 추진 중이다. 가장 먼저 2월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출범할 예정이다. - 산업은행 이전을 전격 공약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염두에 둔 공약인가? - 지역 형평성, 노조 반발 등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관철할 계획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 고준위 방폐장 등 주민 합의가 필요한 지역 현안이 많다. - 정치 개혁의 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생각은? - 10년간 정치 행보를 돌아본다면. - 정치 개혁을 위한 선결 과제는 무엇인가? - 대선이 40여 일 남았지만 지지율은 정체 상태인데.

〈표7〉 부산일보 대선후보 인터뷰 질문 목록

부산2022대선미디어감시연대

주소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88 301호
전화 051-802-0916
홈페이지 www.bssiminnet.or.kr
이메일 buun1@hanmail.net

• 문서번호	부산대선미디어감시연대2022-03
• 수 신	각 언론사 보도국, 편집국
• 발 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제 목	[대선보도모니터] 지역언론 균형발전·지역소멸 해법에 주목. 후보별 언론정책 평가는 외면
• 날 짜	2022년 02월 16일

지역언론 균형발전·지역소멸 해법에 주목. 후보별 언론정책 평가는 외면 윤석열 후보 언급량 가장 많고, 안철수 후보 단일화 이슈로만 부각

모니터 기간	2022년 02월 07일(월) ~ 2022년 02월 13일(일)
모니터 매체	국제신문, 부산일보 지면, KBS부산, 부산MBC, KNN 메인뉴스

모니터 기간 총 보도건수는 93건으로, 신문 77건(국제신문 37건, 부산일보 40건), 방송 16건(KBS부산 4건, 부산MBC 7건, KNN 5건)이었다. 신문은 스트레이트 기사가 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의견기사 11건, 기획기사 12건, 인터뷰 기사가 4건이었다. 그동안 정책·공약 보도는 후보가 발표하는 공약을 소개·나열하는데 그쳐 전반적으로 심층성은 부족했었다. 하지만 이번 모니터 기간 동안에 지역언론은 후보별 정책·공약을 비교한 해설·분석 기사들을 선 보였다.

보도유형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보도유형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스트레이트	22	27	49	리포트	3	1	2	6
의견/칼럼	7	4	11	단신	1	4	3	8
기획	5	7	12	기획	0	2	0	2
인터뷰	3	1	4	인터뷰	0	0	0	0
기타(사진기사 등)	0	1	1	기타	0	0	0	0
합계	37	40	77	합계	4	7	5	16

<표 1> 선거보도 건수 및 보도 유형별 건수

국토균형발전·지역소멸 해법에 주목한 국제신문과 부산MBC

국제신문은 <李 "국세·지방세 비율 6 대 4" 尹 "세수 불균형 발생해 반대">(2/8, 4면), <李 남부수도권 현실성 관건, 尹 55보급창 이전안 내놔야>(2/9, 4면)를 통해 각 후보별 지방소멸 해법과 균형발전에 대한 전략을 정리·분석하여 실현가능성과 추진 의지를 짚어보았다. 후보들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구체적 공약과 비전을 알기 위해 해당기사는 각 후보 선대위에 서면질문지를 보내어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입장을 받았고, 윤석열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아 KBS 등 각 언론의 인터뷰와 답변 자료 등을 취합하여 관련 공약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신문은 <누가 당선돼도 세제개편 단행..공시기도 하향 조정 유력>(2/10, 4면)에서 후보들의 정책·공약 가운데 유권자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점검하였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주택공급확대'는 가격안정에도움은 되겠지만 세부적인 부지 확보나 예산 마련 등 구체적 방안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주거복지와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이 실패한 주요 요인으로 세금과 대출 규제를 쫓는 것에 후보들이 대체로 공감하고 있어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모니터 기간에 선보인 국제신문 기획기사는 부산민언련이 진행한 대선보도 유권자 의견조사 많이 언급되었던 '후보별 공약 비교보도', '유권자 중심보도', '전문가 분석보도' 등에 해당되어 유권자에게 유용한 선거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2/7	국제신문	지지율 10% 안팎 안철수 반전카드...배우자 리스크도 여전	향후 표심 가를 4대 변수
2/8	국제신문	분권개헌 李 "가능한 것부터" 尹 "국민합의 우선"	지방분권, 지방소멸 해법 후보별 비교
2/8	국제신문	李 "국세·지방세 비율 6 대 4" 尹 "세수 불균형 발생해 반대"	후보별 균형발전 전략 <상>
2/9	국제신문	李 남부수도권 현실성 관건, 尹 55보급창 이전안 내놔야	후보별 균형발전 전략 <하>
2/10	국제신문	누가 당선돼도 세제개편 단행..공시기도 하향 조정 유력	유권자 대선 관심 공약 분석 <1> 부동산정책
2/7	부산일보	안철수 "대선 주자 엑스포 홍보전 참여하자" 깜짝 제안	부산 현안 '딥 풀이' (1) 부산월드엑스포
2/7	부산일보	이·윤 "에타면제·공항공사 운영"	부산 현안 '딥 풀이' (2) 가덕신공항

2/9	부산 일보	이재명 "특별지사체장, 국무회의" 윤석열 "GTX건설, 접근 성 강화"	부산 현안 '딥 풀이' (3) 메가시티
2/9	부산 일보	금융·관광·비즈니스 중심' 원론적 입장...랜드마크 사업 해 법 제시 못 해	부산 현안 '딥 풀이' (4) 북항 재개발
2/11	부산 일보	무허가 계곡 시설 정비' '사람에게 충성 않는다' 호평	2030 지지자 '찐심'
2/11	부산 일보	후보 추진력이 단점? 이해 안 돼 대장동 의혹 입장, 생각 달라	2030 지지자 '찐심'
2/11	부산 일보	지지 후보는 달라도 '네거티브'편 가르기'엔 거부감	2030 지지자 '찐심'

<표 2> 국제신문, 부산일보 기획보도

부산일보는 대선 30일을 앞둔 2월 7일부터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가덕신공항', '부울경 메가시티', '북항재개발' 등 부산 현안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실행 의지와 이행 방안을 따져 묻는 '부산 현안 딥(Deep)풀이' 기획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기사들을 통해 부산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각 현안에 대해 4명 후보 모두 유치·지원에 적극적이었지만 전략에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했고, 특히 심상정 후보의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일회성 대형 이벤트 개최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설정하고, 핵심과제로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려가 되기도 한다. 부산월드엑스포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파급효과가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 규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다른 3명의 후보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전하기도 했다.

또 부산일보는 청년의 '찐(진짜)심'을 들여다보기 위해 '가짜 지지자 찾기'를 기획하여 2월 11일 1면과 3면에 기획 기사 3건을 게재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 속에 숨어든 가짜 지지자를 찾아내는 토론 콘텐츠로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90분 토론에서 후보들의 자질과 리스크 등에 대한 2030세대의 후보 평가를 담고 있다.



<그림 1> 부산MBC '지방자치,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대담 보도

방송 뉴스는 리포트 6건, 단신 8건, 기획 2건이었다. 이중 기획보도는 16개 지역 MBC와 9개 지역 민방이 기획한 대담 <지방자치, 대선후보에게 묻는다>로 이재명, 심상정 후보의 대

담내용을 전하는 부산MBC 2건이 유일했다. ‘기획보도’는 아니지만 대담보도를 통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지방자치와 지역소멸에 대한 각 후보들의 철학과 해법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전하고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지방 정부에 더 큰 권한을 주기 위한 헌법개정, 남부 수도권 추진으로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결단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균형발전은 '시대정신', 양당정치의 최대 피해자는 '지방과 청년'이라며 어느 지역을 살더라도 동등한 삶이 보장되는 '삶의 공간의 민주화'를 강조했다.

후보들의 공약 대거 발표에 맞춰 정책·공약 보도 다수 보도한 지역언론

선거보도 주요 내용은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소개하거나 분석한 보도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양적·질적으로 정책보도가 많아진 것은 본격적인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구체적 공약과 정책 발표가 많아진 상황과 연동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공약보도에 기획기사 이외에도 후보들이 발표한 정책을 그대로 전달한 ‘받아쓰기 공약’ 보도와 주도적 질문보다는 후보의 말을 주로 정리한 인터뷰 기사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정책·공약	9	12	1	3	3	28
후보·정당 행보	7	5	0	2	1	15
선거전략	3	11	0	0	0	14
선거이벤트	8	4	0	0	0	12
갈등·논란	5	4	0	0	0	9
선거 사무	3	4	1	1	0	9
시민사회운동·정책제안	5	1	0	1	1	8
선거판세·여론조사	4	2	2	0	0	8
기타(후보평가)	1	4	0	0	0	5

〈표 3〉 대선 보도 내용별 건수(*중복 집계)

다음으로 후보와 선대위 행보, 선거전략을 소개하는 기사가 각각 15건, 14건이었다. 후보의 행보를 소개하면서 행보의 의미를 선거전략으로 분석하여 행보와 선거전략이 중복 체크되는 기사도 있었는데, 국제신문 <盧心 잡아라...여야 가릴 것 없이 노무현 소환>(2/8, 5면)과 부산일보의 <김종인 찾아 '80분 밀담'...이재명의 승부수일까>(2/8, 4면)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방송뉴스는 행보 보도는 거의 단신으로 전하는 경향을 보였다.

모니터 기간 중 야권단일화와 TV토론회가 주요 선거이벤트로 나타났다. 야권단일화 관련

보도는 9건, 토론회는 3건으로 12건이었다. 갈등·논란 보도는 윤석열 후보의 ‘청와대 적폐 발언’이 6건(국제신문 3건, 부산일보 3건), 토론회 무산, 야권후보 단일화, 이재명 후보 배우자(김혜경 씨) 논란 등을 포함해 9건이었다. 특히 이재명 후보 배우자 ‘황제의전’으로 사과한 김혜경 씨 보도는 국제신문 1건이었는데, 부산일보는 <‘경합 열세’ 판단 이재명, 지지율 ‘영끌 모드’>(2/10, 4면)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하락의 반등 카드 중 하나로 배우자 논란과 사과를 언급하여 선거전략으로 분류되었다.

시민사회운동 동향 및 정책 제안(의견기사) 보도는 8건으로, 시민사회운동은 거의 단신이거나 사회면 1단 기사로 보도하였다. 다만 국제신문은 칼럼과 사설을 통해 대선 후보에게 부동산, 국토균형발전 해법을 요구했다.

부산 방문한 대선후보 보도 윤석열 후보 보도건수 가장 많아

부산민언련 대선모니터 기간 중 주요 대선 후보들이 부산을 방문하여 PK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부산지역 언론은 대선후보의 부산방문에 어떤 점을 주목하여 보도했는지 부산을 방문한 날짜순대로 기사량과 보도내용을 분석했다.

윤석열 후보 부산방문 보도(15건)		
1/14	부산일보	"출렁이는 PK표심 잡자"...이재명 이어 윤석열도 'PK 1박 2일'
1/14	KNN	윤석열 후보, 부산·경남 잇따라 방문(단신)
1/15	부산MBC	윤석열 부산 선대위 발대식, 부산 공약 발표(단신)
1/15	KNN	윤석열 "가덕 예타 면제, 부울경 GTX 건설"
1/17	국제신문	윤 PK 찾아 표심 구매 "BTX 잇고, 산은 부산으로 옮길 것"
1/17	부산일보	PK서 쏟아낸 '묻고 더블로 공약'...씨줄 날줄 엮기에 달렸다
1/17	부산일보	대선 후보 부산 정책 대결 키워드는 '금융 중심지'
1/17	부산일보	국힘 윤석열후보에게 수산인 '수산공약' 전달
1/17	부산MBC	여야후보 대표, 부산서 총력전
1/17	KBS부산	여야 정치권, 부산 대선 공약 대결 '점화'
1/17	KNN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공약 논란
1/17	KNN	더불어민주당 양산지역 당원들 탈당, 국민의힘으로(단신)
1/18	국제신문	대선에 또 소환된 '가덕신공항'..조기착공 이어질까
1/18	부산일보	꼭 이뤄야 할 '산업은행 부산행'...글로벌 금융도시 '지름길'
1/19	부산일보	동분 윤석열, 서주 이재명 ... 동서로 엇갈린 '빅2' 부산 행보
안철수 후보 부산방문 보도(5건)		
1/22	KNN	안철수 주말 동안 PK 방문, 첫 일정 경남(단신)
1/23	부산MBC	안철수 "유일한 PK후보" 부산서 지지 당부(단신)
1/23	KNN	안철수, '내가 PK 출신 유일 후보'

1/24	부산일보	안철수, 부산 전통시장 찾아(사진기사)
1/24	국제신문	안철수 "이재명과 1대1 대결 땀 내가 압승"
심상정 후보 부산방문 보도(3건)		
1/28	KBS부산	정의당 심상정, 부산 찾아 노동계 지지 호소(단신)
1/28	KNN	'대선 대목' 여야 민심 잡기 총력
1/28	부산MBC	"설 앞두고 민심잡기 경쟁 가열"
이재명 후보 부산방문 보도(11건)		
2/5	부산MBC	이재명 대선 후보 1박 2일 부산 유세 진행(단신)
2/5	KBS부산	이재명, 1박 2일 부산 방문... '부산 공약' 발표(단신)
2/5	KNN	이재명 대선 후보 PK 방문, 지역 공약 발표(단신)
2/6	부산MBC	이재명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책임지겠다"
2/6	KBS부산	이재명 '부산 공약' 발표...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2/7	부산일보	가덕신공항 과연 될까' 의구심 '이재명 정부'가 펼쳐 내겠다(인터뷰 기사)
2/7	국제신문	이 "가덕신공항 2029년 꼭 개항할 것"(전화 인터뷰 기사)
2/7	국제신문	이 "영호남·제주 묶어 남부수도권 만들겠다"
2/7	부산MBC	여야 부산 공약 엇비슷, 차이점은?
2/7	KNN	특색없는 지역공약, 원전·자치분권은 '온도차'
2/8	국제신문	이낙연 빈자리 채운 최인호 이재명 부산일정 밀착 수행

〈표 4〉 대선후보 부산방문 보도(방문일 순)

먼저 후보별 보도량을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 15건, 안철수 후보 5건, 심상정 후보 3건, 이재명 후보 11건으로 압도적으로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보도 건수가 많았다. 윤석열·심상정 후보는 금요일, 안철수·이재명 후보는 일요일에 방문하여 주말이라 보도가 적었다고 하기에 도 보도량에서 심한 불균형을 보였다.

특히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각각 방문했음에도 기사에서는 함께 언급되는 경우도 많았다. 가령, 이재명 후보가 방문한 2월 7일에 부산MBC <이재명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책임지겠다">(뉴스데스크, 첫번째 리포트)에서 이 후보가 발표한 부산 9대 공약을 소개하며 기사 말미에 "1월 15일 윤석열 후보도 가덕신공항 여타면제와 2030엑스포 부산유치, 산업은행 부산이전 등 부산 공약 발표한 바 있어"와 같이 윤 후보의 공약을 한 번 더 언급함으로써 언론의 노출빈도를 높였다. 하지만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보도량은 많았지만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분석하거나 점검한 기사는 적었다. 대부분 후보가 방문한 장소와 행보를 단순하게 전하는 스케치 기사거나, 후보의 연설이나 발언을 그대로 옮겨놓은 기사에서 공약들이 나열되는 수준에 그쳤다.

매체별 특징을 보면, 부산일보는 윤석열 후보 부산 방문 관련 기사가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공공기관이전 공약'과 'KDB산업은행 이전 공약'에 특히 주목하면서 양강 후보의 정책대결의 키워드를 '금융중심지'라고 강조했다. 국제신문은 이재명 후보의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을 위한 9대 공약' 중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과 남부수도권을 부각했다. 안철수 후

보 방문 보도는 지역방송에서 'PK 출신 유일 후보'만 강조하는 보도를 이어갔고 구체적 공약은 언급되지 않았다.

윤석열·이재명 후보는 방문 당일 이외에도 방문 예고, 후일담 등 후속기사까지 보도된 것에 비해, 안철수·심상정 후보는 당일 행보조차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다만 심상정 후보는 설 연휴 직전 방문하여 지역신문이 연휴 휴간으로 보도가 되지 않았다는 점,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윤석열 후보에 비해 구체적 공약이 적었다는 점도 보도량이 적은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기에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지역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해당 지역에 방문하여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보도는 있어야 한다. 또 지역 공약이 없으면 물어야 한다.

안철수 후보, 단독 공약·행보 언급 5건 '단일화 이슈'에 언급 11건

반면, 안철수 후보는 부산 방문때보다 야권단일화 이슈로 더 많이 언급되고 있었다. 모니터 기간 중 '단일화' 이슈로 안철수 후보가 등장하는 기사는 11건이다.

날짜	언론사	제목
2/7	국제신문	지지율 10% 안팎 안철수 반전카드...배우자 리스크도 여전
2/8	부산일보	수면 위 떠오른 야권 단일화, '윤-안 담판' 임박했나
2/8	부산일보	서슬 퍼런 '단일화 반대'...이준석의 속내는 뭘까
2/8	국제신문	윤석열 "단일화 배제 안 한다" vs 안철수 "공개 언급 진정성 없어"
2/9	부산일보	YS 3당 합당에 당한 김대중, DJP연합으로 '권토중래' 성공
2/9	부산일보	"고민해 본 적 없다"는데도 끊이지 않는 '단일화 갑론을박'
2/10	부산일보	윤석열 '담판론', 안철수 '철수' 노리나?
2/10	KBS부산	[부·울·경 여론조사] 대선 D-27, 이재명 27% vs 윤석열 42.5%
2/10	부산일보	대선 후보 단일화, 지방에 무슨 도움 되나
2/10	국제신문	윤 "단일화 10분내 가능" 발언에 안 "일방적 생각에 우려"
2/11	부산일보	윤-안 '단일화' 1차 데드라인 코앞, 장외 신경전만 난무

<표 5> '단일화 이슈'로 안철수 후보 언급 기사

안철수 후보 단독으로 대선 후보로서 정치 철학이나 공약을 소개한 기사는 단 한건도 없 이, '단일화 전담 후보'로 프레임화 되어 윤석열 후보와 함께 등장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그 동안 보인 정치행보의 영향도 있지만, 언론이 과도하게 '단일화' 이슈에서 안철수 후

보를 부각시킨 경향이 있다. 특히 KBS부산은 <부·울·경 여론조사> 대선 D-27, 이재명 27% vs 윤석열 42.5%>(2/10)에서 안철수 후보 당선가능성이 지지도와 달리 1%대에 머문다고 지적했고, 야권단일화 선호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5% 이상 우세를 보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굳이 오차범위 내 격차를 ‘우세’라 언급하여 야권단일화에서 안철수 양보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였다.

2차 토론회, 지역언론 활성화 관련 질문

정작 지역언론은 보도하지 않아

지난 11일 대선후보 4자 2차 TV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개최되는 만큼 각 후보들에게 통합형 언론자율기구, 공영방송의 독립성, 언론 소통 계획, 지역언론 지원 대책, 포털 정책 등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의 시대에 지역언론 지원 대책,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통합형 언론 자율기구	공영방송 독립성	언론 소통 계획	지역언론 지원 대책
이재명	-강력한 자율규제 시스템	-정치로부터 독립 *공약 참조	-정기적으로 소통	-바우처 제도
윤석열	-사법적 절차	답하지 않음	-문재인 정권 언론정책 비판 -매주 1회 소통	답하지 않음
심상정	-자율적 규제방식 최선 -언론중재법 필요	-언론개혁 제1의 과제 -이사 추천 국민위원회 구성	-매주 1회 소통	-지역신문기금 재원 확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강화 -정부광고 집행기준 정비 -미디어 바우처
안철수	-언론중재법 폐기 -언론 자율규제 바람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핵심 -사장 추천위원회 -이사 다양성 확보	-문재인 정권 언론정책 비판	-영국 사례(직접 자금 지원)

<표 6> 후보별 언론정책 요약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답하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는 미디어바우처 지급을, 안철수 후보는 영국의 사례처럼 직접 자금 지원을 내세웠다. 심상정 후보는 미디어바우처 지급과 함께 지역신문기금 등 공적 재원을 확대하고 정부광고 집행기준의 정비를 강조했다.

대통령 후보의 언론관 및 언론정책은 민주적 소통과 공론화의 중요한 척도이다. 더구나 지역언론 지원 대책은 지방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지역언론에 바로 연결되는 정책과 공약이다. 하지만 정작 정책대상자인 지역언론은 이와 관련된 보도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부산2022대선미디어감시연대

주소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88 301호
전화 051-802-0916
홈페이지 www.bssiminnet.or.kr
이메일 buun1@hanmail.net

• 문서번호	부산대선미디어감시연대2022-04
• 수 신	각 언론사 보도국, 편집국
• 발 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제 목	[대선보도모니터] 공식선거운동 시작되자 선거보도량 늘고 정책보도 줄었다
• 날 짜	2022년 02월 23일

공식선거운동 시작되자 선거보도량 늘고 정책보도 줄었다 여전히 양강 후보 집중 보도…과연 공정한가

모니터 기간	2022년 02월 14일(월) ~ 2022년 02월 20일(일)
모니터 매체	국제신문, 부산일보 지면, KBS부산, 부산MBC, KNN 메인뉴스

2월 15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대선후보들의 행보도 더욱 바빠졌다. 또 대선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주요 공약이 공개되어 각 후보가 중점을 두는 분야는 무엇인지 보여주는 지표로 주목받았다. 지역신문은 후보들 공약에서 균형발전 공약이 빠진 것에는 주목했지만 지역 입장에서 10대 공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모니터 기간 청년세대 설문조사 통한 대선 인식과 후보 평가, 부산공약 집중 점검 등 기획 기사가 보도되어 긍정적이었던 반면, 공식선거가 시작되었음에도 오히려 ‘이재명-윤석열’ 양강 후보에만 초점이 맞춰진 점은 형평성에 어긋나 문제였다.

선거보도량 늘고 지역신문의 기획보도 눈에 띄어 지역방송은 대선 의제 여론화 역할 못해

모니터 기간 총 선거보도 건수는 125건으로 지난 주 93건보다 32건 늘었다.(표1) 신문 94건(국제신문 46건, 부산일보 48건), 방송 31건(KBS부산 8건, 부산MBC 11건, KNN 15건)으로 특히 방송이 지난 주 15건 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공식 선거개시로 늘어난 선거 관련 소식이 반영된 것이다.

여전히 선거 유세 행보와 정책을 단순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월등히 많았지만, 국제신문은 청년세대 인식 설문조사, 유권자관심 공약 점검을, 부산일보는 부산현안 ‘딥’풀이 등 기획 기사를 실어 유권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국제신문은 코로나19 방역과 피해

보상책 점검을, 부산일보는 ‘경부선 지하화’ ‘부산금융중심지 개발’ ‘고준위핵폐기물’ ‘지역 부동산’ 정책에 대한 후보 입장과 평가를 보도했다. 특히 부산일보는 <‘던지고 보자’식 지역 공약, 되레 불신만 키운다>에서 윤석열 후보 유세에서 발언한 ‘가덕신공항 임기중 완공, 대구신공항 3.8km 활주로’에 대해 현실성 없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지역방송은 보도량은 증가했지만 후보·정책을 검증하고 해설하는 기획은 없었고 후보 유세 행보 위주로 보도했다. KBS부산은 보도량도 8건으로 제일 적었고 유세행보 단신 뉴스가 대부분으로, 지역 공영방송 역할에 소홀했다.

보도유형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보도유형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스트레이트	29	31	60	리포트	3	6	6	15
의견/칼럼	8	11	19	단신	5	6	6	17
기획/해설	8	6	14	기획	0	0	0	0
인터뷰	0	0	0	인터뷰	0	0	0	0
기타(사진기사 등)	1	0	1	기타	0	0	0	0
합계	46	48	94	합계	8	11	12	31

<표 1> 선거보도 건수 및 보도 유형별 건수

정책·검증보다 후보 행보·단일화 여부에 관심 치중

양강 후보 집중 보도 여전...어떤 후보 출마했는지조차 알 수 없어

대선보도를 주제 및 내용으로 분류하면 후보·정당 행보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정책·공약보도가 24건, 후보와 정당의 선거전략 보도가 17건으로 보도됐다.(표 2) 정책 기획 보도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보도는 지난 주 28건에 비해 오히려 줄고 후보와 선거전략 등 후보 따라가기식 보도는 더 늘었다. 본격 선거운동이 개시되면서 정책보다는 선거전략, 공방 위주의 행보 기사가 더 늘었기 때문이다.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정책·공약	7	12	0	2	3	24
후보·정당 행보	13	10	6	7	6	42
선거전략	11	0	2	2	2	17
갈등·공방	2	3	0	0	0	5
기타(선거 사무 등)	5	6	1	1	1	14
유권자 정책제안 운동	4	1	0	2	0	7
선거판세·여론조사	5	6	0	0	1	12
후보자검증 및 후보비판	1	2	0	0	0	3

<표 2> 대선 보도 내용별 건수(*중복 집계)

후보 언급도 이재명-윤석열 양강 후보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표3). 두 후보의 부산 방문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14명 후보가 입후보하여 10대 중점 공약을 발표하고 본격 경쟁이 시작되었는데 보도는 두 후보 비중이 69.6%로 더 초점이 모아졌다. 한편 부산일보는 안철수 후보 언급이 타 언론과 비교해 많았는데 윤석열-안철수 후보 야권 단일화 여부 관련한 분석 기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단순언급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이재명	31	25	3	3	5	67
윤석열	34	33	3	3	4	77
심상정	10	7	1	1	0	19
안철수	19	21	1	2	0	43
김재연	0	0	0	0	1	1

〈표 3〉 기사 내 언급 후보 빈도

정당 언급 비중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치중이 더 크게 나타났다.(표4) 양당의 언급 비중이 전체 76%를 차지한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 첫날조차 <선거전 첫날, 이재명-윤석열 '부산 빅뱅'>(부산MBC, 2/15), <막 오른 대선, 이재명.윤석열 '부산' 공약>(KNN, 2/15) 이라며 두 후보 위주로 보도했고, <여야 휴일 맞아 시내 곳곳에서 집중 유세>(KBS부산, 2/20)와 같이 여야 행보라면서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유세만 보도하는 식으로 편향을 보였다.

단순언급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더불어민주당	32	27	6	7	7	79
국민의힘	37	33	7	6	6	89
정의당	10	5	1	1	0	17
국민의당	16	16	0	2	0	34
진보당	0	0	0	1	1	2

〈표 4〉 기사 내 언급 정당 빈도

후보별 10대 주요공약 분석도 양강 후보 치중 지역 입장에서 주요 공약 평가 제대로 안 해

후보 보도량 뿐 아니라 내용에도 아쉬움이 있다. 대선후보 10대 주요 공약이 공개되면서 후보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점검이 가능해졌지만 지역신문은 유세 행보에 이어 10대 공약 점검도 이재명-윤석열 후보 위주로만 비교·분석했다. 부산일보는 <균형 발

전' 뺀 윤석열, 이재명은 4번째 순위로 제시>(2/14)에서 '양강 후보 10대 공약 분석'을 아예 명시했고 국제신문은 <입으로만 외친 '균형발전'...국가사업 의지 공약에 담아야>(2/15)에서 안철수, 심상정 후보 핵심 공약을 전하기는 했으나 10대 공약 전문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만 공개했다. 후보들이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10대 공약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면 균형발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역방송은 보도하지 않았다.

4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제 23677 호 대선 D-23 부산일보

'균형 발전' 뺀 윤석열, 이재명은 4번째 순위로 제시

양강 후보 10대 공약 분석

1호 공약 모두 '코로나 극복'

이재명
전국 5개 메가시티 특화 발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윤석열
직속 '코로나 특별본부' 설치
청와대 해체로 대통령실 개혁

균형발전'을 약속했지만, 윤 후보 10대 공약에선 균형발전 관련 의제가 빠져있다. 10대 공약은 후보가 집권 시 중점을 두고 이행하는 약속으로 후보가 인식하는 시대정신이 반영된다. 윤 후보는 한국 지방신문협회(한신협) 인터넷(부산일보 1월 26일 자 1·4면 보도) 등에서 지역 균형발전이 '양극화민름 시급한 현안'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사실상 정책 우선순위에선 관련 의제를 '뒤로 미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균형발전 정책을 비교적 상위 순서로 제시한 이 후보 측은 10대 공약에서 "전국을 초광역 단위의 산업-현안 중심의 5개의 수도(메가시티)로 특화 발전시키는 등 전 국토의 균형성장 추진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울경 메가시티 등의 적극 지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

의지를 정식 공약으로 명문화했다. 공약 1호는 양 후보 모두 코로나 위기 극복이었다. 이 후보 측은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매출 회복 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상호협력 지원 채무부담 경감 정책을 제시 등으로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 피해 소상공인 피해를 완전히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 측은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마관'을 공약 1호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당하고 안전한 손실보상, 방역 조치 기간 손실에 인해 패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보상 사각지대 해소 등을 목표로 한다"며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위임과 동시에 설치해 긴급구조 프

비하는 경제 대책으로 여겨진다. 이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개헌론에 붙을 지피고, 연 100만 원 전 국민 기본소득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이 눈길을 끈다. 윤 후보는 공약시 정의대를 해체하겠다고 대통령실 개혁안을 10대 공약에 담았고, 여성가족부 폐지도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코-안보 공약도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스마트강군과 국악중심 실용외교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제도화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 핵심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계승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 체결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 우선 이행에 초점

<그림1> 부산일보 2월 14일 4면 '양강 후보 10대 공약 분석' 기사

국제신문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대선D-22 3

입으로만 외친 '균형발전'... 국가사업 의지 공약에 담아야

■ 주요 대선후보 10대 공약 분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윤석열 국민의힘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이재명	국민의힘
1. 전국 5개 메가시티 특화 발전	1. 전국 5개 메가시티 특화 발전
2.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2.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3. 전국 5개 메가시티 특화 발전	3. 전국 5개 메가시티 특화 발전
4.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4.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5. 전국 5개 메가시티 특화 발전	5. 전국 5개 메가시티 특화 발전
6.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6.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7. 전국 5개 메가시티 특화 발전	7. 전국 5개 메가시티 특화 발전
8.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8.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9. 전국 5개 메가시티 특화 발전	9. 전국 5개 메가시티 특화 발전
10.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10.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주요 대선 후보의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여야 4당 후보들의 10대 공약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만 지역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담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모두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주장했던 만큼 지방과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문서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다.

이 후보는 >전국을 초광역 단위의 산업-현안 중심 5개의 수도(메가시티)로 특화발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지역 대표산업 발굴과 지원 >업을 '지역 사업'으로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기 정부에서도 이들 사업들이 주요 국정 과제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후보들이 사업지와 관계 없이 국가 사업이면 주요 공약에 포함시켜 균형발전 의지를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후보들의 10대 공약 키워드는 '코로나 극복'이었다. 여야 4당 후보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를 약속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내린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코로나 발생 시점부터 완전극복 시점까지의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지원, 윤 후보는 방역조치 기간

와 소비쿠폰 발행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윤 후보는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 제-개정 및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위임과 동시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방역 효과 적용과 더불어 자영업자 영입기간 제한 폐지 등, 심 후보는 특별재난지역 배후와 특별재난지역 대기금 조성을 통한 지원 마련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각각 미래 성장전략,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내세워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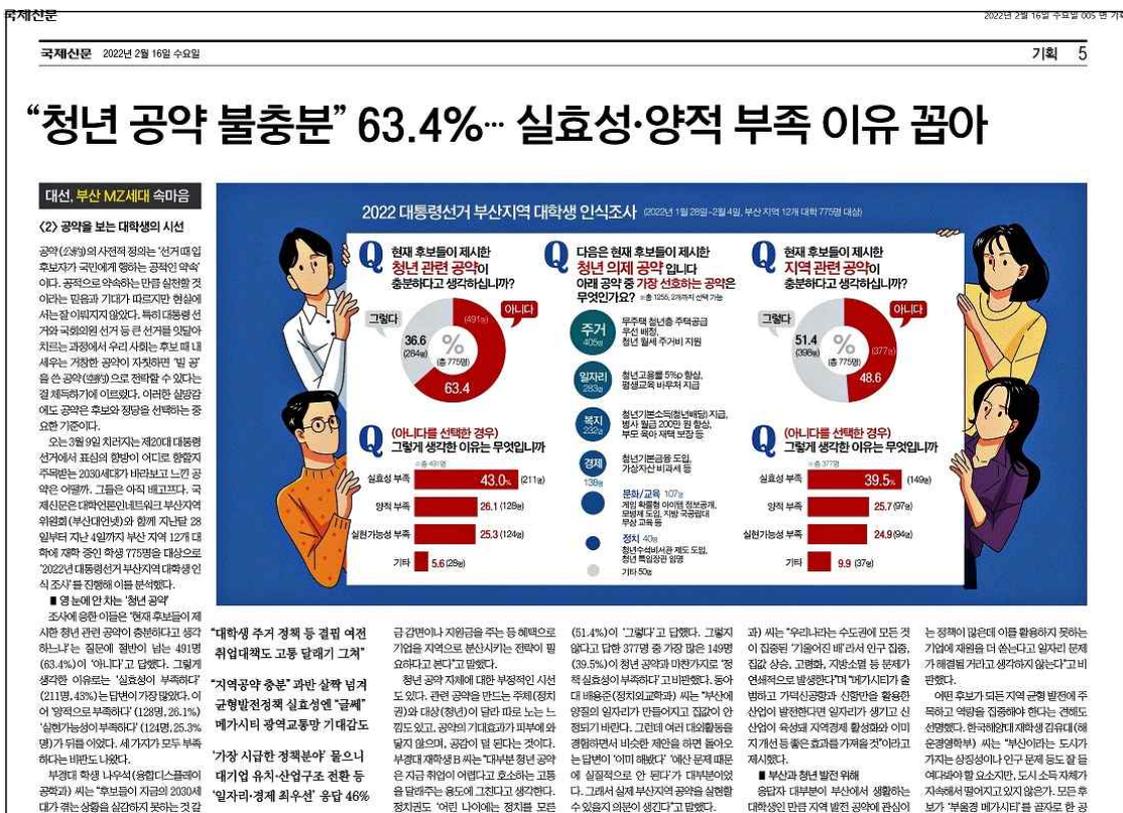
또 이 후보는 임기 내 전 국민 대상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그림2> 국제신문 2월 15일 3면 '주요 대선후보 10대 공약 분석' 기사

유권자 의제 제안 무관심 속

국제신문 청년세대 770명 인식조사 기획 눈에 띄어

또한 모니터 기간에는 시민사회의 ‘이주민 공약 제안’ ‘기후위기 공약 제안’ ‘문화 분권 관련 공약’ ‘항만민영화 중단, 항만공사 지방이양’ 등 유권자의 적극적인 정책제안이 있었다. 하지만 부산MBC가 이주민 공약, 항만민영화 중단 등 2건, 국제신문, 부산일보가 문화분권 공약을 보도한 것 외에 유권자 움직임을 따로 보도하지 않았다. 지역언론에서는 대선 ‘스윙 보터’를 강조하며 PK 민심의 향배가 중요하다고 보도해왔는데, 정작 유권자의 요구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 ‘표’로만 대상화하는 모양새였다.



〈그림3〉 국제신문 2월 16일 5면 ‘대선 부산MZ 세대 속마음’ 기획 기사

이런 경향 속에 국제신문은 14일부터 ‘대선, 부산 MZ 세대 속마음’을 기획 보도해 눈에 띄었다. 대학언론인네트워크 부산지역위원회와 부산지역 4개 대학 학보사와 협업하여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부산지역 대학생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기사화한 것이다. 당사자인 청년들과 연계하여 대선 후보에 대한 인식과 공약 평가, 그리고 청년이 바라는 공약을 연속으로 보도했다. 단순한 지지율 조사를 벗어나 일자리, 청년층 주거문제, 젠더,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청년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를 묻고 특히 ‘지역’ 청년의 고민을 들었다는 점에서 적절한 기획으로 평가한다.

2월 14일 1면 <부산 MZ 31% “호감 후보 無” 46% “일자리 시급”>
2월 14일 3면 <이 '대장동. 욱석' 윤 '김건희.무능'...MZ 혼돈 비호감 꼬리표>
2월 16일 5면 <“청년 공약 불충분” 63.4%...실효성·양적 부족 이유 꼽아>

△ 모니터기간 국제신문 ‘대선 부산MZ 세대 속마음’ 보도목록

대통령 선거가 2주 남았다. 후보 행보와 갈등·공방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 적극 보도해야 할 때다.

부산2022대선미디어감시연대

주소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88 301호
전화 051-802-0916
홈페이지 www.bssiminnet.or.kr
이메일 buun1@hanmail.net

• 문서번호	부산대선미디어감시연대2022-05
• 수 신	각 언론사 보도국, 편집국
• 발 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제 목	[대선보도모니터] 후보간 공방·행보 받아쓰기 보도로 유권자 정치피로감에 지역언론도 한 몫
• 날 짜	2022년 03월 02일

후보 간 공방·행보 받아쓰기 보도로 유권자 정치피로감에 지역언론도 한 몫

모니터 기간	2022년 02월 21일(월) ~ 2022년 02월 27일(일)
모니터 매체	국제신문, 부산일보 지면, KBS부산, 부산MBC, KNN 메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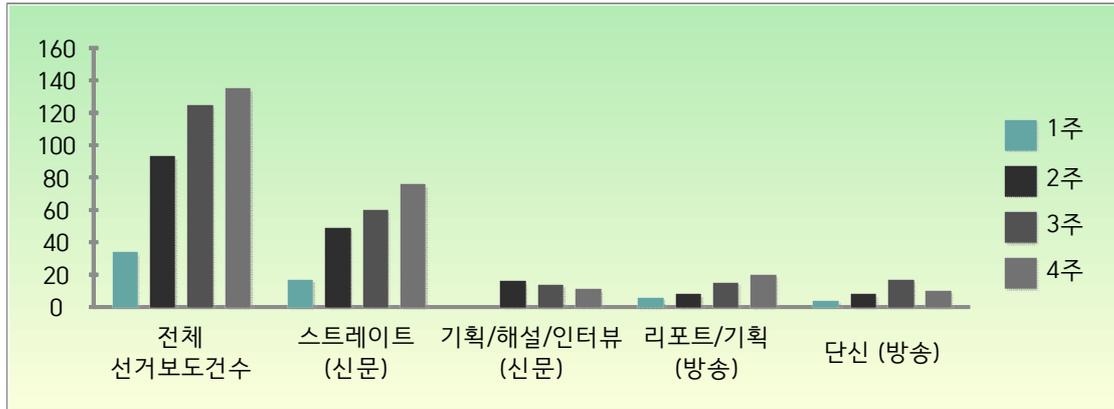
2월 마지막 주 지역언론의 대선관련 보도건수는 135건으로 국제신문 53건, 부산일보 52건, KBS부산 7건, 부산MBC 10건, KNN 13건이었다. 보도 유형별로는 신문은 스트레이트 기사가 7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의견기사 14건, 기획기사 9건, 인터뷰 기사가 2건이었다. 방송 뉴스는 리포트 14건, 단신 10건, 기획보도는 6건이었다.

보도유형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보도유형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스트레이트	38	38	76	리포트	4	7	3	14
의견/칼럼	6	8	14	단신	3	3	4	10
기획/해설	6	3	9	기획	0	0	6	6
인터뷰	0	2	2	인터뷰	0	0	0	0
기타(사진기사 등)	3	1	4	기타	0	0	0	0
합계	53	52	105	합계	7	10	13	30

<표 1> 선거보도 건수 및 보도유형별 건수

전체 대선보도 건수는 지난주 125건보다 조금 늘었지만, 기획/해설기사는 15건으로 보도건수 대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신문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2월 2주부터 공약을 비교·검증하는 기획/해설기사는 점점 감소하고, 후보와 선대위의 행보와 선거전략,

공약과 공방을 나열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는 증가하는 추세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후보들의 공보물과 유세 발언을 토대로 한 공약 검증 기사가 더욱 필요한데, 언론은 행보·갈등·공방 위주 보도로 그 반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2월 주별 보도유형 건수

공방과 행보 좇는 기사 대폭 증가, 검증기사는 실종 지역언론 갈등 공방 키우는 스피커 역할했다.

스트레이트 기사 76건 중 유세 현장 상황과 발언을 그대로 전달한 행보 기사가 21건, 후보들의 공방·갈등을 전하는 기사가 17건, 여론조사 및 판세 예측 기사 26건이었다. 대장동, 단일화 이슈 등을 표심에 미칠 영향 중 하나로만 분석할 뿐 검증은 부재했으며, 해당 주에 주요 검증 대상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선 언급조차 않았다. 특히 부산일보는 17건의 여론조사 관련 기사를 22일부터 3일간 게재했는데, 모두 동일한 여론조사¹⁾ 결과를 토대로 한 기사였다. 부산, 울산, 경남 유권자의 민심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할 수도 있지만, 후보들이 지역별로 제안한 공약에 대한 지역민의 선호보다 단순히 후보 지지율, 단일화 여부 등만 나열한 여론조사 보도가 과연 세부 지역 민심을 제대로 보도한 것인지는 되묻고 싶다. 국제신문 역시 스트레이트 기사 38건 중 24건을 후보 행보와 후보 간 공방을 전하는데 할애해 공약검증보다는 후보의 발언과 행보만 좇는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후보·정당 행보 기사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전략을 전하는 기사 27건, 판세·여론분석 기사 25건, 정책·공약 기사 23건으로 나타났다. 주로 행보나 공약을 나열하는 기사에서 각 후보들의 선거전략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는 기사 내용으로 행보-공약, 행보-전략, 전략-판세분석 등으로 중복 체크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정

1)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2월 19~20일 18세 이상 부울경 유권자 2802명(부산 1000명, 울산 801명, 경남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책·공약 기사도 행보나 선거전략에 따른 나열수준으로 공약 검증이나 분석은 거의 없었다.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후보·정당 행보	18	3	5	6	5	37
선거전략	14	11	0	2	0	27
선거판세·여론조사	2	23	0	0	0	25
정책·공약	3	7	3	4	6	23
갈등·공방	11	5	0	1	0	17
정책제안	5	5	0	2	2	14
선거 사무	4	2	2	2	0	10
TV토론	3	4	0	0	0	7
기타	7	2	0	0	0	9

〈표 2〉 대선 보도내용별 건수(*중복 집계)

새로운 공약이 발표되더라도 판세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만 주목하며 정책 자체에 대한 평가나 검증은 하지 않았다. 2월 25일 국제신문이 1면과 4면에 게재한 <제 3지대에 던진 '다당제 연합' 대선판 흔들까>, <이 "윤 빼고 협력" 반윤연대 결집 윤 "전부 통합" 정부교체론 강화> 기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정치개혁의 방안으로 '다당제 연합'을 이재명 후보가 제시했지만, 정치권의 공방과 각 후보의 이해득실만을 전할 뿐이었다.

방송에서는 KNN이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점검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2월 21일부터 6일에 걸쳐 '가덕신공항', '부산엑스포 유치', '부울경 메가시티', '항공우주청', '탈원전 vs 원전 재확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과 입장은 전하는 내용이었다. 부산경남의 주요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과 차이를 알려줬지만 가덕신공항, 엑스포, 메가시티 등은 이미 여러 차례 소개된 공약이고 '우주항공청' 공약은 공공기관 입지를 부울경에 두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해당 공약에 대한 평가나 실현가능성 등 심층적 분석은 없었다.

행보·공방 기사의 65.9% 따옴표 제목 사용

검증 없는 공방 '받아쓰기' 보도에

유권자 정치피로감 언론도 한 몫

선거운동이 치열해지면서 후보들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역언론도 후보들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 후보들의 정제되지 않은 막말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국제신문은 <거칠어지는 입...李 "국힘 사람 죽기 기다려" 尹 "노무현 팔아 선거장사">(2/21,

티브 선거를 비판했다. 하지만 정작 원색적 비방을 화면을 통해 더욱 확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더욱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대부분 담고 있었다.



<그림 3> 부산MBC 뉴스데스크 네거티브 비판 보도(2/25)

또한 이번 모니터 기간 대선 관련 보도 135건 중 47건이 제목에 직접인용을 사용했다. 직접인용 47건 중 후보의 공방과 행보를 소개한 기사는 31건이었다. 다시 말해, 공방·행보 기사의 65.9%가 제목에 따옴표를 이용해 후보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이다. 기사 제목은 유권자가 기사를 접하는 가장 중요한 시각적 지표다. 제목 때문에 기사를 읽게 되고 때로는 제목만 보고 기사 내용을 단정하기도 한다. 관행처럼 행해지는 따옴표 제목이 선거시기 유권자에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피로감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이 치열해지면서 후보들의 발언 수위도 높아져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언론이 나서서 이러한 공방을 여과 없이 전하는 보도들이 지역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실현 못할 선심성 공약 소개 보도 말고

지역민 삶에 도움 되는 실현가능성 짚어주는 보도 필요

검증 없는 네거티브 공방 보도 증가로 정작 유권자에게 꼭 필요한 공약분석이나 유권자 참여를 유도하는 정보는 매우 적었다. 모니터 대상인 신문 지면과 방송 뉴스는 공간적·시간적 한계로 인해 심층적인 공약·정책검증 기사를 내는데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기사나 유튜브 채널을 통한 공약 실현 검증 콘텐츠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부산MBC 라디오 <자갈치 아지매>(2/25) 유튜브 방송 화면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모니터 기간 중 부산MBC 라디오 <자갈치 아지매>에서 소개한 ‘20대 대선 후보 부산지역 공약’ 편이 눈에 띄었다. 2월 25일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 출연하여 대선 후보(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가 제안한 부산지역 공약들의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을 짚었다. 선거시기에 남발되는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한 단순한 선심성 공약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실현가능성의 지표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계획을 얼마큼 후보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양미숙 처장은 이런 점에서 특정 후보가 예산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밝히지 않은 비율이 90%가 넘는 점을 지적하며 가덕신공항, 북항재개발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유권자로서 가늠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선거운동이 치열해지면서 후보들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역언론도 후보들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 후보들의 정제되지 않은 막말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중계하며 그 내용을 확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숙고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선거기간 동안, 지역 유권자가 선심성 공약에 속지 않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전해주길 기대한다.

부산2022대선미디어감시연대

주소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88 301호
전화 051-802-0916
홈페이지 www.bssiminnet.or.kr
이메일 buun1@hanmail.net

• 문서번호	부산대선미디어감시연대2022-06
• 수 신	각 언론사 보도국, 편집국
• 발 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제 목	[대선보도모니터] 대선 마지막 주, 유불리 따지는 판세보도 넘쳐나
• 날 짜	2022년 3월 8일

대선 마지막 주, 유권자 위한 보도 적고 후보 유불리 따지는 판세보도 늘어나

모니터 기간	2022년 02월 28일(월) ~ 2022년 03월 6일(일)
모니터 매체	국제신문, 부산일보 지면, KBS부산, 부산MBC, KNN 메인뉴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결렬 기자회견(2월 27일)으로 시작해 3월 3일 윤석열-안철수 후보 야권 단일화, 또 그로 인한 안철수 후보 사퇴가 이어진 숨가쁜 한 주였다. 4, 5일 양일간은 사전투표가 진행됐고,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진행된 야권 후보 단일화에 언론의 관심은 두 후보 합의 내용보다도 이로 인한 후보 별 유불리, 사전투표에 미칠 영향 등 판세 변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후보 유세 행보와 막바지 공약 발표 등 쏟아지는 선거 정보 속에서 그간의 공약을 총정리해 유권자의 종합 판단을 돕고자 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 보도 또한 부족했다.

‘표심 알 수 없다’면서도 판세분석 기사 쏟아내 단일화, 사전투표 유불리 후보자 입장에서 전달

모니터 기간 총 선거보도 건수는 159건으로 지난 주 135건보다 24건 증가했다(표1). 신문 123건(국제신문 57건, 부산일보 66건), 방송 36건(KBS부산 10건, 부산MBC 16건, KNN 10건)으로 신문 보도량이 증가했지만 정책보다는 여론조사 등 기획기사 증가가 반영된 수치다.

보도유형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보도유형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스트레이트	42	42	84	리포트	4	7	8	19
의견/칼럼	6	10	16	단신	6	4	2	12
기획/해설	6	11	17	기획	0	5	0	5
인터뷰	0	2	2	인터뷰	0	0	0	0
기타(사진기사 등)	3	1	4	기타	0	0	0	0
합계	57	66	123	합계	10	16	10	36

〈표 1〉 선거보도 건수 및 보도 유형별 건수

대선 마지막 주 들어서면서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정책 보도는 줄고 오히려 판세 보도가 대폭 늘었다. 국제신문이 대한민국의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 공동기획으로 10대 지역현안을 질의한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를 보도했고, MBC가 후보 정책을 비교한 기획보도한 것을 제외하면 대선 마지막 주임에도 정책이 주요 보도로 다뤄지지 않았다.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선거판세·여론조사	11	23	0	0	3	37
기타(선거 사무 등)	6	16	6	6	2	36
후보·정당 행보	18	8	3	4	2	35
선거전략	4	14	1	0	1	20
정책·공약	6	0	0	6	1	13
갈등·공방	6	3	0	0	0	9
유권자 정책제안·운동	3	2	0	0	1	6
후보자검증 및 후보비판	0	0	0	0	0	0

〈표 2〉 대선 보도 내용별 건수(*중복 집계)

특히 부산일보는 여론조사 보도 외에도 2월 28일 ‘한국신문협회 공동기획 민심르포’ 기획과 한신협 3차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23건(35%)을 판세보도에 할애했다. ‘민심르포’는 한신협 소속 신문사가 전국 10개 권역 유권자 인터뷰 기사를 11건에 걸쳐 보도했는데, 지역별로 정부 평가와 후보에 대한 지지여부 등의 인터뷰를 실었다. 제목을 보면 ‘아직 누구 찍을지’ ‘지역별 온도차’ ‘판세도 엇치락뒤치락’ 등 초접전 양상을 드러냈고, 기사에서도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찍을 후보 없다’ ‘부동층이 많다’며 지역 유권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반복적으로 전했다. 한편 대전·충청 지역 민심을 담은 <‘충청 대통령’ 선출 열망 속 ‘진국 후보’ 판별 중>은 주민들의 ‘충청 대통령’ 열망이 크다며 후보들의 충청 연고를 강조하기도 했다. 선거 마지막 주 기획으로 전국의 유권자 ‘판세는 오락가락’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역 유권자에 필요한 보도인지 의문이다. 지역신문사의 협업이라는 기회를

흥미위주로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권자 평가 사항일 수도 있는 단일화 과정에 대한 평가, 합의내용과 공동 정책 내용에 대한 보도는 없었다.

부산MBC 후보 공약 전문가 평가 함께해 유용



△부산MBC 뉴스데스크부산 3월 4일 <‘지방분권·해양정책’ 공약은?>

한편 부산MBC는 2월 28일부터 5회에 걸쳐 기획보도 ‘대선후보에게 듣는다 부산과의 약속’에서 후보 정책을 비교했다. 대선후보의 부산 1호 공약, 가덕신공항, 원전 안전성, 지역경제 희생방안, 지방분권·해양 공약을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소개하고 평가를 듣는 형식이었다. 정책 나열에 그치지 않고 각 분야의 과제와 평가를 짚었고, 상세한 인터뷰와 답변서는 유튜브 채널에도 공개했다는 점에서 유권자에 유용한 기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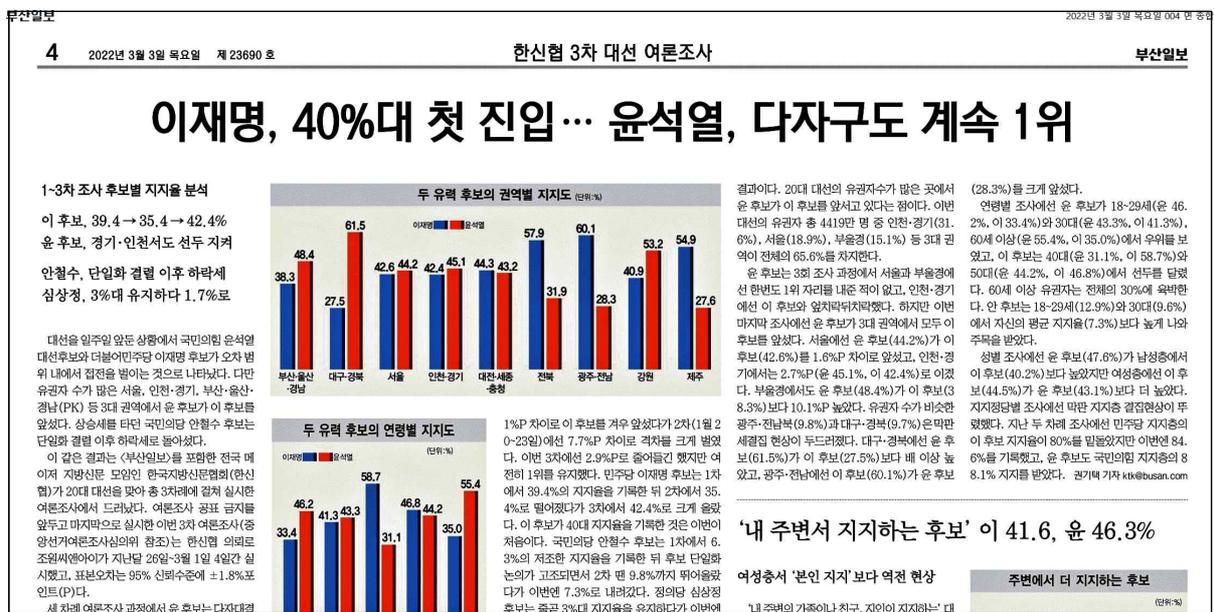
지역신문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 결과 보도 부산일보 여론조사 오차범위내 차이 ‘1위’로 표기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앞두고 지역신문은 각각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국제신문은 3월 2일 대한민국의지방신문협회(이하 대신협)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고, 부산일보는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부산일보는 1차(12월 31일자), 2차(1월 25일자)에 이은 3차 여론조사 결과였다.

먼저 국제신문은 1면 <이재명 43.7% 윤석열 44.6% 안철수 7.3%> 등 7개 기사로 후보별

지지도, 당선가능성, 정당지지도, 문재인정부 평가 등을 보도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각각 취약한 TK, 호남에서 선전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고, 단일화 하지 않아도 '초박빙'이라며 2월 27일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결렬 기자회견에 따른 영향을 분석했다.

부산일보는 한신협 1~3차 여론조사 결과 모두 1면에 배치했는데, 1차는 <이재명 39.4 vs 윤석열 39.5 '초박빙'>, 2차는 <윤석열 42.9 vs 이재명 35.5...윤, 오차범위 밖 우세>, 마지막 3차는 <이재명 42.4 윤석열 45.3... 격차 줄며 '초박빙'>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양강 후보의 지지율만을 내세워 상호 간 우위를 '초박빙', '우세'라 중계하는 공통점을 보이는 제목들이었다.



△부산일보 3월 3일 4면 3차 대선 여론조사 보도

한신협의 1~3차 여론조사는 각 여론조사마다 문항 별 차이를 보였다. 1차 여론조사에서는 '지방을 잘 살릴 수 있는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찬반' 문항이 포함됐고, 2차 여론조사에서는 '보수 단일화' 문항이 특징이었다. 3차 여론조사는 '내 주변서 지지하는 후보', '민생해결 적임 후보', '야권 단일화'를 물어본게 특징이었다. 또 1~3차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보별 지지율 추이를 분석하기도 했으나, '다각도의 지지율'을 7개 기사로 나열했다는 점에서 경마식 보도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특히 부산일보는 여론조사 보도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었다. 한국기자협회의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은 여론조사 결과 중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일 경우 지켜야 할 원칙을 제16조에 기술해 두고 있는데, 부산일보의 이번 보도 중에서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부산일보 3월 3일자 4면 <이재명, 40%대 첫 진입...윤석열, 다자구도 계속 1위>에서는 각 후보별 1차~3차 지지율 변화를 비교했는데, '세 차례 여론조사 과정에서 윤후보는 다자대결에서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었다. 윤 후보는 1차 조사에서 0.1%p 차이로 이 후보를 겨우 앞섰다가 2차에선 7.7%p 차이로 격차를 벌였다. 이번 3차에선 2.9%p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1위를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여론조사 오차범위는 $\pm 1.8\%$ 로 1차, 3차 지지율 차이는 모두 오차범위내에 속하므로 1위라고 등수를 매기는 것은 틀린 표기지만, 부산일보는 제목과 본문에서 윤석열 후보가 3차 모두 1위를 기록했다고 잘못된 정보를 전한 것이다.

한편 5면 <'정권 교체론' 과반 유지...민주, 정당 지지도 첫 우위> 역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지지도 차이가 오차범위내에 있었지만 제목에서 '우위'라고 표현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앞두고 나온 마지막 여론조사였던 만큼 더 정확하게 보도했어야 했다.

대선 마지막 주, 그동안 쏟아진 공약을 총정리해 소개하는 보도나 유권자 참여를 독려하는 보도, 코로나시기 안전하게 투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보도 등 유권자에게 필요한 보도를 기대했다. 하지만 지역언론의 대선보도는 변화없이 유권자 보다는 후보·정당 위주의 보도를 이어갔다.